



인물만남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을 만나다!

협회주도의 선제적 정책개발을 위해 작년 11월 26일 공식출범한 낙농정책연구소가 지난 제1회 이사회(1.23)에서 사업을 승인받은 바 있다. 생산자 단체의 전문 연구소로서 당찬 출발을 한지 3개월 남짓.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현재 연구활동에 여념이 없는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을 만나보았다.

Q) 현재 낙농정책연구소 연구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현재 대구에 살고 있어 현재는 주중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KTX를 이용하여 연구소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업무가 있을 때는 수시로 나올 계획이며, 연구소에 나오지 못하는 날은 인터넷을 통한 업무연락 및 현안에 대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Q) 연구소가 협회에 등지를 틀었는데, 소장님께서 보시는 협회 분위기는 어떤지요?

제한된 인원으로 열심히 업무처리를 하는 협회 직원들이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낙농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안 및 정책관련 업무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협회의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를 위해 직원들이 각자의 맡은 바 업무를 매우 기민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지난 협회 제1회 이사회를 통해 낙농정책연구소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연구활동을 끌어갈 계획이신지요.

최근 낙농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 중 2013년도에는 3대 핵심과제(원유가격 연동제 연착륙, 육우송아지가격안정 및 환경규제에 따른 낙농부문대응책)에 역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 외에 중장기과제로, 낙농제도개혁, 우유소비 확대, FTA 낙농피해보전대책과 함께 낙농의 전후방산업 연관분석, 우유·유제품 수요분석 등 낙농분야의 필요한 연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Q) 오래도록 낙농정책연구소의 설립을 고대해왔기에 연구소 활동에 대한 농가들의 기대가 큼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낙농현실 때문에서인지 단기간에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기를 바라



는 지나친 기대도 있습니다. 초대 소장으로서 의욕도 있으시겠지만 부담감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낙농정책연구소에 대한 낙농가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농이 직면한 현안들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도 특정 이해당사자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를 포함한 낙농산업 구성원들의 소통과 공감대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낙농정책연구소는 필요한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촉매역할을 할 것입니다.

Q 좋은 대안을 제시해도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시행하는 정부의 자세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모습과는 달리 어떠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기대 하시는지요.

낙농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를 포함한 낙농산업 구성원 모두의 낙농현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인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같은 사실인식을 바탕으로 금후 낙농발전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낙농의 생산물인 우유가 이미 쌀과 함께 국민식생활의 필수식품으로 정착하였으며, 낙농은 타 농업 및 축산부문과 달리 많은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달라도 각국의 낙농정책이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은 그 같은 낙농의 특성 때문입니다. 낙농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정책 또한 그 같은 점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의 낙농정책도 글로벌스탠더드에 입각해서 수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난 10여 년간 겪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금후 약 14년에 걸쳐 모든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됩니다. 따라서 정책은 더 이상 시행착오를 반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가장 시급한 원유가연동제 마련에 있어 합리적 시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령 각 주체가 어떤 자세이어야 할까요?

가격연동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낙농산업 구성원 상호간에 타결된 합의내용을 양자가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 제도시행의 첫 해인 2013년의 원유가격연동제시행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수요자(유업체)와 공급자(낙농가)는 1차적으로 합의내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만일에 예기치 못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Q) 오랜 세월 낙농과 한우 분야에 몸담으신 학자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자신 지금까지 낙농문제를 연구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낙농은 제도의 산물'이란 표현을 자주 써 왔습니다. 그만큼 낙농의 안정 성장을 위해서는 낙농의 특성을 감안한 안정된 제도의 조기정착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낙농의 생산성은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으나 낙농제도는 20세기 초의 낙후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낙후된 제도가 국제화시대에 갈 길이 바쁜 낙농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FTA 체제 하에서 언제까지고 현재와 같은 낙후된 제도를 유지하면서 미봉책으로 일관할 경우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은 언제라도 재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필수식품으로 정착한 우유의 원활한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소비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국내낙농이 직면한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낙농산업 구성원 모두가 낙농발전이라는 공동목표의 달성을 위해 '각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에 앞서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